

報 道 資 料

안전 ①, ②는 99년 3월 12일 조건부터
안전 ③은 99년 3월 25일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題目 : 금융발전심의회 99년도 제1차 회의 개최

主要内容

-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 지청 고려대교수)는 99. 3.11(목) 은행회관에서 금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99년도 금융정책 방향', '금융기관 신용대출 정착방안' 및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 99년도 제1차 금발심 전체회의 -

- 일 시 : 99. 3.11(목), 15:00~17:00
-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안 건
 - ① 99년도 금융정책 방향
 - ②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 ③ 금융기관 신용대출 정착방안. 끝.

* Internet ID(www.mofe.go.kr) PC 통신 ID(go EPIC)

報道資料 生産課 : 金融政策局 金融政策課 TEL : 500-5341~3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

金融發展審議會
99年度 第1次 全體會議

99年度 金融政策方向

1999. 3. 11(木)

財 政 經 濟 部
金 融 政 策 局

< 目 次 >

I. 98年 金融政策 推進實績斗 成果

II. 99年 對內外 經濟與件 및 金融政策課題

III. 99年 金融政策方向

- 1. 金融改革의 마무리**
- 2. 效率的인 金融下部構造 構築**
- 3. 伸縮的인 巨視金融政策 運用**
- 4. 部門別 資金供給의 擴大**

I. 98年 金融政策 推進實績 및 成果

- ◇ 당면한 金融·外換危機와 지난 30여년간 누적되어 온 金融制度和慣行의 취약성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데 주력
 - 『外換市場의 안정』 → 『金融·企業構造調整, 信用梗塞解消』
→ 『實物經濟 活性化』의 단계별 정책대응

1. 推進內容

□ 외환위기이후 98.4월 : 外換流動性 확보에 주력

- IMF등 공적자금의 조기도입, 金融機關 外債의 만기연장 및 外平債 발행등을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
- 高金利를 유지하는 등 緊縮政策을 추진하여 외환시장 안정 도모

□ 98.4월이후 상반기중 : 緊縮基調 완화, 退出중심의 構造調整

- 콜금리 인하 : (98.3) 22.4% → (98.6) 16.3%
- 信用梗塞 緩和 유도
 -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中小企業에 대한 대출 확대
 - 53억불 外貨資金 지원등 輸出入金融 지원 강화
 - 미분양주택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住宅資金支援 확충
- 退出중심의 金融·企業構造調整 추진
 - 금융·기업구조조정 촉진방안 마련 및 금융구조조정 재원조달 방안 확정(64조원)
 - 5개은행 퇴출 및 55개 퇴출기업 선정

□ 98년 하반기 이후 : 實物景氣 活性化 및 回生爲主의 構造調整

- 은행중심의 1차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
- 企業改善作業(workout) 본격 추진 및 5대재벌 구조조정방안 확정
- 금리하향 안정기조를 유지(회사채 금리 : (98.7) 13.7% → (98.12) 8.3%)
하고 內需振作 효과가 큰 소비자금융·주택금융 지원을 확대

2. 推進成果

□ 金融市場의 安定 回復

- 98년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금리 및 환율이 안정
 - * 환율(원/달러) : (97.11) 1,164 → (97.12.24) 1,965 → (98.12) 1,208 → (99.3.9) 1,236
 - * 회사채금리(%) : (97.11) 141 → (97.12.24) 31.1 → (98.12) 8.0 → (99.3.5) 8.6
- 외환보유고 확충(520억불), IMF차입금 상환(48억불) 시작

□ 金融·企業構造調整의 기본틀 마련

- 66개 不實金融機關(전체 금융기관의 16%)을 퇴출시키고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BIS비율을 10%수준으로 제고)
- 企業經營 透明性 提高등 기업구조개혁 5대과제의 추진을 위한 法令 및 制度를 정비
- 大企業의 사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 實物景氣의 回復勢

- 98.11월 이후 산업생산의 뚜렷한 개선추세, 어음부도율 감소 등 실물경기 회복 시작
 - * 산업생산(%) : (98.1/4) △62 → (3/4) △95 → (99.1) 147
 - * 어음부도율(서울 % : (97.12) 1.39% → (98.1) 0.42% → (99.2) 0.11

II. 99年 對內外 經濟與件 및 金融政策課題

- ◇ 최근 우리경제는 강도 높은 構造調整의 성과에 힘입어 건박한 金融危機가 해소되고 內需景氣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 對內的으로는 높은 실업률·실업장기화 및 위기감의 해소에 따른 구조개혁 유인의 약화 가능성 등 경제적 어려움이 상존
 - 對外的으로는 세계경제 둔화·국제금융시장 불안·선진국의 무역규제 강화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1. 對內外 經濟與件

□ 實物經濟 與件

- 금년중 우리경제는 構造調整의 성과와 景氣振作 노력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경기회복이 일부업종에 머물고 있고 고실업으로 인한 소비 위축, 투자부진등으로 순조로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움

□ 金融市場 與件

- 金利는 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하에 금융기관의 資金仲介機能도 점차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기조가 지속될 전망
- 換率은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外換供給 優位지속으로 절상압력이 계속될 것이나, 달러 강세로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株價는 금리안정·景氣回復期待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世界經濟 與件

- 世界經濟는 국제금리 등 金融與件은 다소 호전될 전망이지만, 成長勢 鈍化·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상존

2. 金融政策 運用上의 挑戰과 課題

□ 金融機關의 能力向上 不振

- 금융구조조정의 일단락으로 退出危險이 減少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재연될 가능성

⇒ 책임경영체제 확립, 신용분석·평가에 입각한 대출심사, 체계적인 위험관리제도 도입 등 金融産業의 能力培養과 內實化 필요

□ 企業構造改革 遲延에 따른 競爭力 弱化

- 경기회복에 따라 기업구조개혁 유인이 약화되어 過多借入慣行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속시킬 가능성

⇒ 기업구조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회계제도·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資本市場 活性化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혁 필요

□ 金融下部構造의 非效率性 持續

- 금융산업에 내재된 각종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지 못하고 금융하부구조 개선이 미흡할 경우 金融産業의 경쟁력 저하 우려

⇒ 자산유동화제도, 신용정보·평가시스템의 정비·예금자보호제도 등 金融下部構造의 先進化를 위한 제도개혁 노력 강화

□ 對内外 與件 惡化로 인한 景氣回復 遲延 및 金融市場 不安定

- 國際金融市場의 불안 및 경기변동 상황에 따라 金利·換率·株價가 急騰落할 경우 순조로운 경기회복을 저해할 우려

⇒ 巨視經濟政策의 效率的인 連繫運用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景氣振作 努力 強化

III. 99年 金融政策方向

◇ 基本方向 ◇

◇ 99년에는 98년에 마련된 構造改革의 기본 틀(hardware)을 바탕으로 우리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체질을 착실히 개선하는 한편

- 적극적인 景氣回復努力으로 2000년이후 經濟 再跳躍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경주

■ 金融改革의 마무리를 통한 金融産業의 競爭力 強化

- 은행구조조정에 이어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공적지원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 금융기관 능력의 배양과 부실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金融인프라 構築을 통한 金融産業의 先進化 圖謀

-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시스템내 상존하는 道德的 解弛 要素를 차단할 수 있는 선진적인 금융 인프라 구축

■ 金融市場安定 기조하에 景氣振作 努力 強化

- 효율적인 政策組合을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신축적 통화정책을 통하여 경기진작노력 강화

■ 脆弱部門에 대한 資金支援을 통하여 景氣의 고른 회복 도모

-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택부문등 需要者 金融을 확대하여 景氣가 전산업에 걸쳐 振作될 수 있도록 유도

1. 金融改革의 마무리

가. 金融構造調整의 마무리

□ 銀行構造調整에 이어 第2金融圈 構造調整을 조속히 마무리

○ 제2금융권은 원칙적으로 大株主의 責任하에 증자·합병 등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되

○ 시스템 危險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에 의한 지원 검토

□ 금년중 총 64조원중 여유재원 21조원을 활용하여 不實債權整理, 增資支援 등 金融構造調整 資金支援을 마무리

○ 12.6조원을 활용하여 신규발생 부실채권을 매입

○ 8.6조원의 재원으로 제일·서울은행 매각손실 및 5개 퇴출은행의 인수은행 추가부실 발생분 보전과 폐쇄금융기관 예금대지급에 사용

* 공적자금 지원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조달(A)	집행(B)			가용재원 (A-B)
		은 행	비은행	계	
부실채권매입	32.5	16.7	3.2	19.9	12.6
증가지원 ¹⁾	17.5	14.0	1.1	15.1	2.4
예금대지급	14.0	-	7.8	7.8	6.2
계	64.0	30.7	12.1	42.8	21.2

1) 손실보전액 6.9조원 포함(은행 5.8조원, 보험 1.1조원)

나. 金融構造調整 支援資金의 效率的 回收

□ 金融構造調整에 따른 財政負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투입된 公的資金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회수와 적극적인 求償努力 강화

① 不實債權 買入資金 및 增資支援 資金은 매입채권 및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적극 회수

○ 성업공사는 자산유동화(ABS), 자산관리기능 확충등을 통해 부동산을 적극 매각

○ 예금보험공사는 주식시장의 추이를 보아가며 가급적 조기에 취득주식을 매각

② 綜金·相互信用金庫·信協 등에 대한 預金代支給 資金은 정리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적극 회수

○ CP, 단기대출금 등은 만기도래시 가능한한 조속 회수

○ 리스자산, 장기대출자산 등은 타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유동화

③ 5개 整理銀行 및 綜金·相互信用金庫 등의 예금대지급에 따른 손실분은 破産節次를 조기에 종료함으로써 손실의 최소화 도모

○ 파산재단의 부실채권은 성업공사 또는 해외투자가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 부실발생에 관련된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추진

□ 자금회수 상황을 종합 점검하기 위하여 財經部를 중심으로 金監委·預金保險公社·成業公社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파산관재인이 정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채권관리 전문인력 확충

다. 金融産業의 能力 向上 및 不實再發防止 努力強化

☐ 금융기관의 경영을 商業性·收益性 위주로 전환

- 불합리한 金融慣行 是正·금융인 力量 提高·責任經營體制 確立·
不實債權整理·공정한 與信審査 등 금융인대회(98.11.23)에서
결의한 5개 실천사항의 착실한 이행
-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경영개선 목표를
설정·추진
 - 정부출자은행에 대해서는 자율경영을 보장하되 경영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경영개선 노력강화
- 주주에 의한 경영 감시제도 확립, 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견제장치확립

☐ 금융기관의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健全性監督 強化

- 채무자의 미래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도입(99.하반기)
- 분기별 결산제도 도입(IBRD 합의사항, 99말까지)을 추진하고,
결산에 따른 공시사항을 강화
- 適期是正措置 및 정기적인 경영평가제도(CAMEL 등) 활성화
- 時價評價制度(mark-to-market principle)의 정착을 지속 추진

2. 效率的인 金融下部構造 構築

가. 資本市場의 活性化

□ 資本市場의 資金仲介機能 活性化

- 企業公開와 上場을 분리하고 上場要件을 緩和하여 기업의 자본 시장 이용기회를 확대

- * 현행 주요 상장요건: 납입자본이익율 25%, 수익가치 주당 10,000원 이상, 부채비율 동업종 평균 1.5배 이하 등

- 코스닥시장의 육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 활성화
 - 500개 유망기업·대형통신회사 및 민영화대상 공기업등에 대해 코스닥시장 등록을 적극 추진
 - 코스닥시장을 뮤추얼 펀드의 주된 거래시장으로 육성
- 債券市場의 活性化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
 - 國債전문딜러제도 도입 등 國債市場의 선진화
 - 선진국형 Inter-dealer Broker 설립 및 代金과 債券의 同時決濟 시스템(DVP) 구축 등 債券流通市場의 整備
 - 선물거래소 개설(99.4월 예정)로 위험 헷지수단 제공

□ 선진화된 企業支配構造 구축과 경영의 透明性 제고

- OECD의 企業支配構造 지침제정과 연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 위원회 설치 운영등 지배구조의 선진화
- 99년부터 국제기준에 맞는 企業會計基準을 전면 시행하고 독립적인 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립하여 회계기준의 전문성 제고
- 社外理事 선임비율 확대(회사당 1인 → 총이사의 1/4)와 채권금융 기관,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역할 제고
- IR(Investor Relations)등 기업설명회의 내실화, 公示義務 위반에 대한 過徵金 제도의 엄정한 시행으로 성실한 企業公示 유도

□ 資本市場의 需要基盤의 擴充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

- 企業年金 制度 및 從業員持株制度(ESOP)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요기반 마련
- 有價證券 賣買差益에 대한 비과세 등 뮤추얼펀드에 대한 지원 강화
- 증권사 顧客預託金 社外預置制(99.6) 및 투신사 遮斷壁(firewall) 장치 강화등을 통해 증권산업의 健全性 監督을 강화
- 資本金要件을 緩和하는 등 證券産業의 新規進入 擴大

* 투신사 : 300억원 → 100억원

* 위탁매매전문증권사 : 100억원 → 30억원

나. 預金保險制度의 強化

☐ 差等保險料率制 도입

- 금융기관별 건전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로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시기 및 도입 방안 마련
-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를 위한 금융권별 지표 및 모형 설정

☐ 금융권별 예금보험료율 재조정하여 기금의 건전성 제고

-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 향후 기금 소요규모, 적정 적립율, 금융기관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예금보험요율 재조정

* 현행 예금보험요율 체계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법상한도	0.5%					
현행요율	0.05%	0.1%	0.15%	0.15%	0.15%	0.15%

다. 資産流動化制度의 定着 및 活性化

☐ 98년 도입된 자산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 유도

- 99년 상반기중 ABS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회계 및 세제관련 제도 발굴 및 개선
- 99년 하반기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인가 추진

라. 信用情報 및 信用評價制度的 改善

□ 信用評價 및 信用情報制度를 整備하여 信用貸出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金融産業의 先進化 도모

- 信用評價・信用情報會社의 信賴性 提高 및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審査分析 능력 개발

□ 信用評價 및 信用情報會社의 능력확충

- 98.9 한국신용평가와 Moody's 합작으로 信用評價會社를 설립하는 등 國際的이고 公信力있는 信用評價機關을 육성

* IFC 등 國際金融機關의 국내 信用情報業 진출 협의중

- 信用情報會社(조사・채권추심업)의 최저자본금 인하(30억→15억)로 進入規制를 완화하여 競爭을 확대

□ 金融機關의 信用分析能力 향상

- 은행연합회의 信用情報共同網의 대상기업을 확대(여신 5억 이상→3억 이상)하여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信用情報를 확충

- 자체 電算網 확충 등 人的・物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하여 專門人力 양성

- 不實會計에 대한 事後監督強化등을 통해 企業財務諸表의 信賴性 提高 노력 병행

3. 伸縮的인 巨視金融政策 運用

- ◇ 실물경기회복을 위한 積極的인 巨視金融政策을 추진하되, 物價上昇壓力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용
- ◇ 실물경기흐름에 따라 『金利-換率-株價』가 善循環 構造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金融市場 政策 推進

가. 巨視金融政策의 基本課題

☐ 경기흐름에 따른 適正 總需要管理

- 實物景氣 回復을 위해 伸縮的인 通貨管理 및 金利의 下向安定 基調 유지가 필요하나, 景氣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경우 총수요압력이 높아져 물가상승압력을 누적시킬 우려
- ⇒ 실물경기의 회복과 총수요압력의 추이를 감안하여 거시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流入外資의 適正 管理

- 經常收支 흑자 유지 및 외환·자본자유화에 따른 외자유입 증가는 환율 및 유동성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구조조정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
- ⇒ 외채의 조기상환등을 통하여 지나친 절상압력 완화 필요

☐ 金利·換率·株價의 安定的 運用

- 실물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이르기 전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실물경제에 대한 기대변화로 금리·환율·주가가 급등락할 경우 경기의 순조로운 회복을 저해할 우려
- ⇒ 金利·株價·換率이 안정적으로 변동되도록 거시금융정책 운용

나. 巨視金融政策의 部門別 運用方向

☐ 通貨金利政策

- 경기회복을 위하여 通貨를 伸縮적으로 供給하고 金利의 下向安定 基調를 유지
 - 통화공급수준은 명목성장을, 유통속도변화등을 감안할 때 98년과 비슷한 13~14%(M3기준) 수준을 유지
 - 시장금리는 실물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상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안정화 기조 유지

☐ 換率政策

- 전반적인 외환공급 우위에 따른 과도한 환율절상압력 완화
 - 금리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여건을 조성
 - 민간부분의 고금리 외채조기상환유도를 통하여 외채 축소 및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등을 도모
 - 外資의 過剩流入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 수립·추진

☐ 證市政策

- 경기회복세에 따라 株價가 추세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 뮤추얼펀드 활성화 등 證市需要基盤을 확충하는 한편,
 - 기업 및 금융기관이 중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지속

4. 部門別 資金供給의 擴大

- ◇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大企業은 資本市場, 中小企業은 銀行 등 間接金融 위주의 자금조달 패턴 확립
- ◇ 中小企業・輸出入金融 등 취약부문과 주택금융 등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부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가. 企業資金支援 擴大

- 信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中小企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全 産業으로 확산
 - 中小企業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 확대
 - 중소기업은행의 통한 자금공급 확대 : 98년 7.9조원 → 99년 8.6조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지원(5,700억원)
 -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강화(상반기 4,000억원)
 - 中小企業에 대한 신용보증공급확대
 - 98년중 33조원의 신용보증 공급에 이어 금년중에도 30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
 -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제도의 점진적으로 확대
 - * 99하반기 : 신용보증실적의 30%, 2000말 : 전면 시행
 - 信用評價會社의 능력확충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信用貸出 관행 정착 노력 강화

□ 輸出入金融 支援을 계속 확충하여 경상수지 흑자 기초를 유지

○ 銀行의 外貨資金 支援이 완전 정상화될 때까지 98년에 마련한 외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53억불 지원)을 계속 유지하면서

- 수출입은행 증자자금을 활용하여 輸出換어음 買入을 추가 지원
- 향후 도입 예정인 공적자금중 8억불 수준을 L/C 개설등 수입금융에 추가 지원

○ 원화 수출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도 확충

- 산업은행의 무역어음할인 전담재원 확충(2조원→3조원)과 수출입 은행의 국내채권 발행(5,000억원) 자금으로 원화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
- 信用保證機關과 輸出保險公社의 수출입금융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99중 5.2조원 공급)

□ 設備資金 支援을 확대하여 경기진작 및 성장잠재력 확충

○ 國策銀行의 설비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

- 산업은행을 통한 설비자금공급을 98년 4조원에서 금년중 6.8조원으로 확대
- 기도입한 US EXIM(20억불, 산은) 및 JEXIM(13억불, 기업은행) 자금으로 시설재 수입 지원

나. 需要者 金融支援 擴大

□ 消費者 金融支援 擴大로 消費活性化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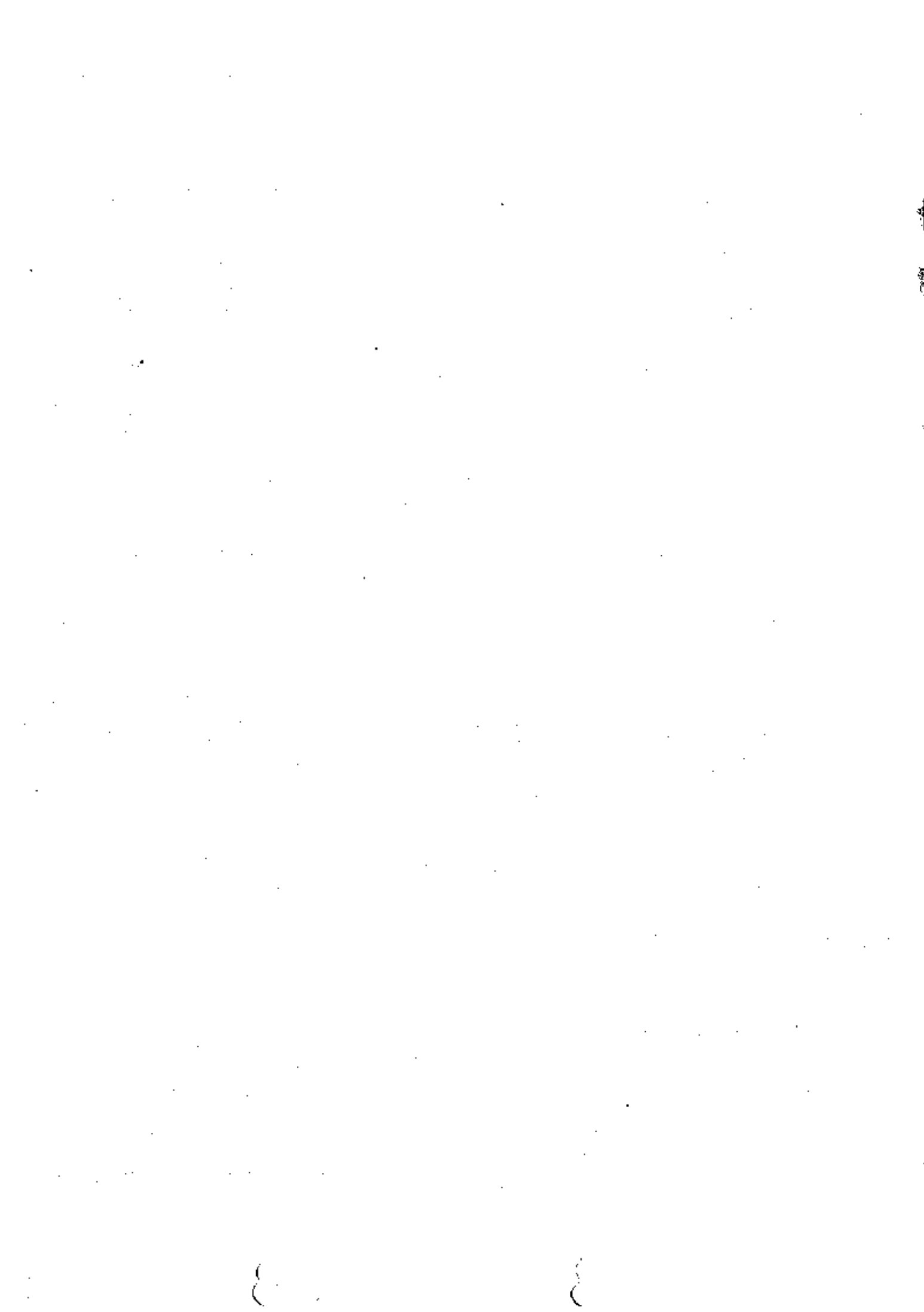
- 기업 대출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家計貸出 金利*인하 유도를 통해 소비자금융지원 활성화

* (97.12) 13.2% → (98.6) 16.5% → (98.11) 13.5% → (99.1) 12.4%

- 은행이 지원하고 있는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지원 활성화
(98말 현재 1.2조원 지원)
- 신용카드업에 대한 신규진입 허용으로 서비스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현금유통한도(월 70만원) 등을 폐지

□ 住宅資金 供給을 확대하여 경기진작 효과가 큰 住宅景氣를 활성화

- 國民住宅基金의 신규주택 중도금(4조원)등 자금공급 확대(건교부)
- 주택은행등 민간금융기관의 주택구입자금등의 대출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유도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 설립등 장기 주택금융 기반 확충
- 중소주택건설업체 건설자금 및 중도금 대출보증 등을 통해 약 6조원 보증을 공급
-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



外換去來 自由化 推進計劃

1999. 3. 11(木)

財 政 經 濟 部
國 際 金 融 局

< 目 次 >

I. 自由化 推進의 필요성

II. 그동안의 金融・外換危機로부터의 敎訓

III. 自由化 推進計劃

1. 그 간의 주요 자유화 조치내용과 건전성 규제 강화

2. 1단계('99.4.1 시행) 자유화 조치내용

3. 외환자유화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4.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

(4. 1실시예정)

5. 2단계 자유화(2000년말) 계획 내용

IV. 자유화에 따른 影響과 향후 政策方向

<참고 1> 외환제도 전면개편의 개념도

<참고 2> 최근의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논의동향

<참고 3> 자본유출규제 주장의 배경과 한계

{

{

I. 自由化 推進의 必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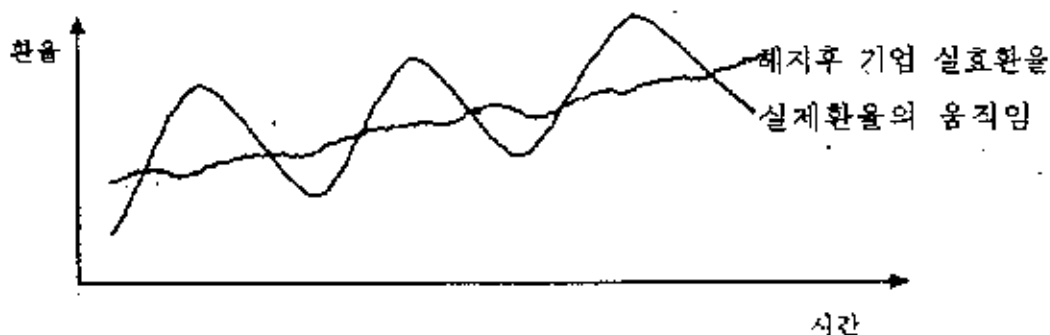
□ 21C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대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개방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운용 패러다임이 요구

- 외환자유화를 통하여 민간의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열린 시장경제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
-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전성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으므로 무역자유화, 금융자유화에 이어 자본·외환자유화 추진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
- 외환의 직접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불리

□ 특히 자유변동환율제도(97.12 실시) 아래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흡수(hedge)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필요

- 고정환율제도에서는 금리변동으로 충격이 흡수되나 변동환율제도 아래서는 환율변동으로 충격 흡수
 - 97.10 홍콩은 단기금리를 200%까지 상승시키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했으나, 일본 엔화는 지난 8월 148엔에서 금년초에는 109엔까지 변동
- 변동환율제도 아래서는 환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해 이를 헤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에 실제 적용되는 실효환율의 변동폭을 축소시킬 필요

* '97 국내상장기업 환차손 규모 : 10.5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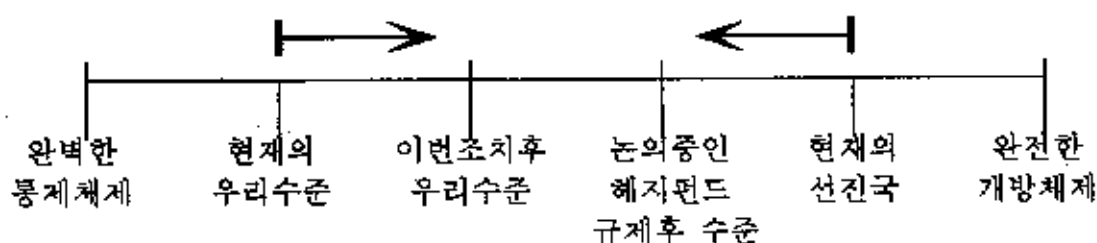
□ 그동안 외환규제로 인해 우리는 헤지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는 등 외국에 비해 외환시장이 매우 취약하고, 우리의 외환거래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편임

• 일일외환거래규모의 대 GDP비율(%) : 싱가포르 144.3, 영국 132.7, 미국 4.3, 대만 4.8, 말레이시아 1.1, 중국 0.02, 한국 0.22

□ 다만, 외환자유화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보완조치와 함께 질서있게(*orderly fashion*) 시행되어야 함

○ 특히 아시아 등의 위기사태에서 노출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방안이 선진국에서 채택된다고 해도 이번 조치후의 우리수준은 선진국에 못미치는 수준



II. 그 동안의 金融・外換危機로 부터의 敎訓

□ 교훈 1 : 잘못된 거시정책으로 환율이 기초경제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때 환투기 유발

○ 시장에서 환율절하 기대가 커지지 않도록 경제정책을 운영 필요

□ 교훈 2 : 국내경제문제가 심각하더라도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거나 단기외채비중이 낮은 경우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음

○ 외환보유고를 확충하고 단기외채비중 관리 필요

□ 교훈 3 : 금융위기는 대부분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융위기가 없어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로 금융 건전성 유지가 진요

□ 교훈 4 : 국내문제가 국제금융시장에 새롭게 노출될 때 위기가
나타날 수 있음

○ '97년 우리의 위기는 한보·기아부도 등으로 우리의 문제점들이
국제금융사회에 새롭게 부각되면서 발생

○ 국가경제정책운영, 기업·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힐 필요

□ 교훈 5 : 국제단기투기세력들은 주로 「자국통화의 차입」을 통해서
환투기 능력을 배양

○ 국제단기투기세력들은 환율 고평가국을 대상으로 국내금융시
장이나 역외자국통화시장에서 자국통화를 차입한 후 환투기 공격

○ 「자국통화의 용이한 차입」을 어렵게 하는 조치 및 자본
유출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교훈 6 : 투기요인이 있을 경우 거주자들도 투기에 참여하므로
필요한 경우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시정조치가 필요

○ '97 홍콩의 경우 비거주자뿐 아니라 거주자도 투기에 참여

○ 경우에 따라서는 선물(환)거래의 증거금을 및 수수료를 인상등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투기활동의 비용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

◇ 외환위기 예방을 위해서는 건전한 거시경제운영과 함께
과도한 투기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 필요

<참고> 각종 환율제도와 환율변동

□ 고정환율제도 아래서는 환율변동이 없기 때문에 환리스크는 없으나,

○ 고정된 환율이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될 때(특히 고평가) 평가절하 등 외환위기가 일시에 올 수 있음

- 멕시코, 태국, 브라질등 대부분의 외환위기는 고정환율제도 채택국가에서 발생 (아래그림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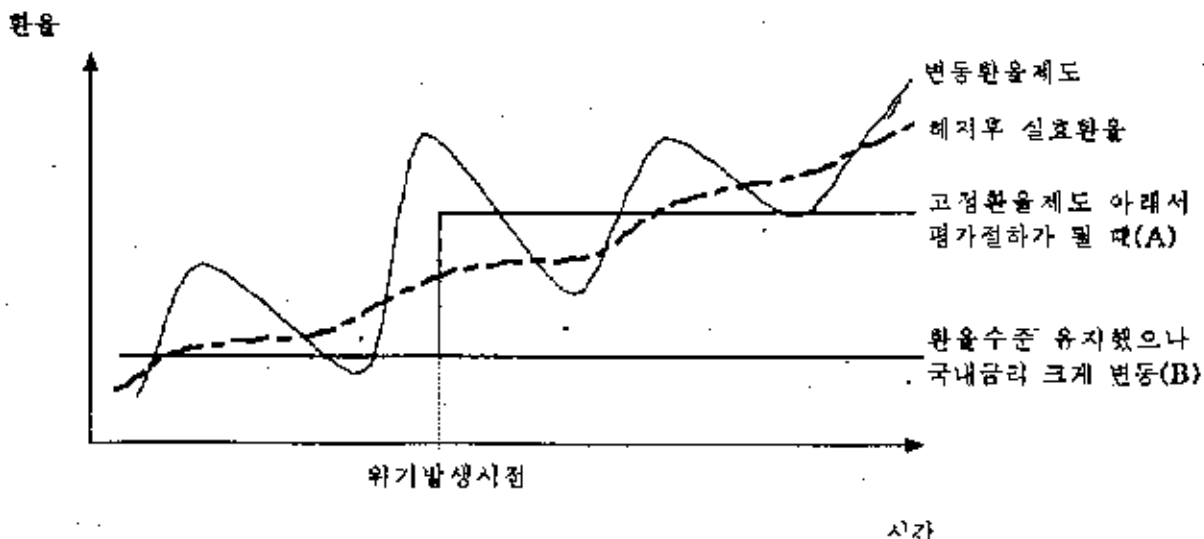
○ 경제기초여건과 괴리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금리변동이 불가피함(통화위원회제도)

- 97년 10월 홍콩은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금리를 200%까지 상승 허용(아래그림 B)

□ 외환위기나 급격한 금리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여야 하나,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문제가 발생

○ 일본의 환율은 지난해 8월 1달러당 148엔에서 금년초에는 109엔선까지 변동

○ 급격한 환율변동에서도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헤지활동을 통해 실효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임



Ⅲ. 自由化 推進計劃

1. 그 間의 主要 自由化 措置內容과 健全性 規制 強化

가. 자유화 추진경과

- ☐ 과거 개발경제 당시 부족한 외환의 관리를 위해 규제위주의 외환 관리 시스템을 유지
- ☐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자유화,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규제위주」로부터 「원칙자유」로 단계적 자유화를 추진
 - '88.11 IMF 8조국 이행과 함께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을 원칙 철폐
 - '90.3 시장평균환율제 채택등 외환시장 활성화 추진
 - '92.9 외국환관리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본격적 자유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
 - '93.6 「제3단계 금융 자유화 및 시장개방계획」 발표시 3단계 외환 및 자본자유화 계획을 발표
 - '94.12 동 3단계 자유화 계획을 대폭 확충한 「외환제도 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95.11 이를 수정·보완
 - 동 계획에 따라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본격 추진하여 상당수준의 자유화를 달성
- ☐ '98.6.22 외환위기를 계기로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한 외자유치 및 21C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구축에 대비한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 2단계에 걸친 외국환거래제도의 전면적 개편방안을 발표

나. 98년중 주요 자유화 추진사항

☐ 자유변동환율제 이행('97.12)

☐ 주식·채권·자금시장 개방('97.12 ~ '98.5)

○ 국내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 자유화('97.12)

○ 기업어음, 무역어음, 상업어음 투자 자유화('98.2)

○ CD·RP·표지어음 투자 자유화('98.5)

○ 상장주식 및 등록법인 주식 투자 자유화('98.5)

☐ 외자유입 촉진과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조기자유화 실시('98.7.1)

○ 기업의 1년이상 중장기 외화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 자유화

○ 기업의 무역신용 자유화

○ 외국인의 국내투자(비상장 주식·채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화

☐ 외국환거래법 제정 ('98.9 공포, '99.4.1 시행)

⇒ 기업의 단기차입, 개인자본거래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환 및 자본거래 자유화를 추진할 새로운 법제도 구축

다. 자유화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 외국환은행의 외환영업부문에 대한 건전성 규제

- 외국환은행의 외화유동성비율(70%이상) 규제 적용대상 범위를 해외현지법인, 역외계정까지 확대('98. 7)
- 잔존단기별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자산·부채의 불일치(GAP) 비율* 규제제도 도입('99.1 시행)
 - * (기간별 누적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총외화자산
- 중장기 자금운용에 대한 중장기 조달의무비율 제고(50%→100%)('99.7)

☐ 외국환은행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외환영업 건전성 규제

- 거래처별 및 국가별 종합 exposure 한도 관리제도를 도입('98.7)

☐ 외국환은행에 대한 감독권한과 책임 명확화·일원화

- 금융기관의 외환부문 건전성 감독주체를 한국은행에서 금감위로 변경('99.1)

☐ 기업의 외화부문 거래내역 공시 강화

- 기업의 외화자산·부채현황, 파생금융거래 실적등 주요 외환 거래 사항을 반기별 → 분기별로 공시('98.12 개편, 2000.1 시행)
- 사업보고서 부속명세서의 항목을 원화/외화로 구분하여 명기('98.7)

2. 1段階('99.4.1 시행) 自由化 措置内容

기업의 對外經常支給 자유화

- 기업경영 관련 용역(컨설팅) 대가 지급 자유화
- 현지법인의 R&D 사업에 직접 수반되는 활동비 지급 자유화 등
- 국내재산 반출 교포자격 확대(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
- 다만, 여행경비·증여성 송금등 개인거래는 2단계에서 자유화

資本去來는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로의 전환으로 자유화폭 확대

- 기업의 만기 1년이하 단기 외화차입 허용(무역관련은 기자유화)
-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투자 및 해외지사설치 자유화
(*초기에는 신고수리부로 운용)
- 선물환·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폐지
-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증권발행 허용
- 비거주자의 만기 1년이상의 예금과 신탁상품 투자 허용

外國換業務 取扱機關 인가제를 登録制로 전환

-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와 직접관련된 범위안에서 외국환거래 취급을 허용하되, 외환부문 건전성 규제를 강화
-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3. 外換自由化 조치로 나타날 수 있는 副作用

- 기업의 무분별한 단기차입 증대와 이에 따른 원화절상 가능성
- 헤지펀드등 국제단기자본의 환투기로 인한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 외화밀반출·재산도파등 불법적 자금이동 가능성

4. 副作用을 最小化 하기 위한 補完措置(4. 1 실시예정)

※ 공청회개최 등을 통해 민간부문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조치 마련

급격한 外貨流出入에 대응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외환전산망 가동(4.1 예정)

- 외환·주식·선물시장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정보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유화에 따른 사후 보고의무 강화
-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모든 외환거래 내역 및 비거주자의 국내 직·간접투자 현황을 파악

○ 국제금융센터 설립·운영(3월중)

-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대응전략 건의

○ 외환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 조기경보지표를 활용, 위기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
- 재경부·한은·금감위등 관련부처간 적기대응체제 구축

企業의 무분별한 短期借入을 抑制하기 위한 대책

- 재무건전성이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해외차입(단기 해외증권 발행 포함) 제한
-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단기차입 제한

- 대기업의 단기해외차입에 대한 계열사보증(담보제공 포함) 금지
-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 및 계열사의 보증도 규제
 - 1단계로 일정시점(예 : 98년말)의 보증잔액을 한도로 운용

과도한 投機去來를 最小化하기 위한 대책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을 제한
 - 비거주자의 현행 원화차입 한도규제(1억원) 유지
 - 비거주자의 단기원화증권발행제한(역외시장에서의 발행포함)
- 기타 원화차입 효과를 갖는 거래 제한
 - 선물환거래 만기시 차액정산 의무화
 - 통화옵션등 파생금융상품을 변칙적으로 이용하여 원화차입 하는 사례 제한
-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주기적 점검 등 건전성 규제 강화

不法 외화반출, 財産逃避 방지를 위한 대책

- 「외환전산망」과 국세청·관세청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불법 외화밀반출에 대한 체계적 감시
 - 거액 외화의 송금 또는 반출입시 국세청·관세청 통보제도의 유지

긴급 有事時에 대비한 安全裝置(safeguard) 마련

- 다른 조치를 가치고는 경제안정 유지가 불가능 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safeguard 활용
 - 유사시 자유화된 자본거래에 대한 허가 의무 부과
 - 과도한 외자유입시 가변예치 의무제도(VDR) 실시 등

5. 2段階 自由化(2000년말) 計劃 內容

◇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

-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국제평화·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UN경제제재등 관련)

□ 개인의 경상지급 자유화

- 개인의 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 교포재산반출등 개인의 경상지급도 자유화하여 경상지급을 완전 자유화

□ 1단계에서 자유화되지 아니한 자본거래의 완전자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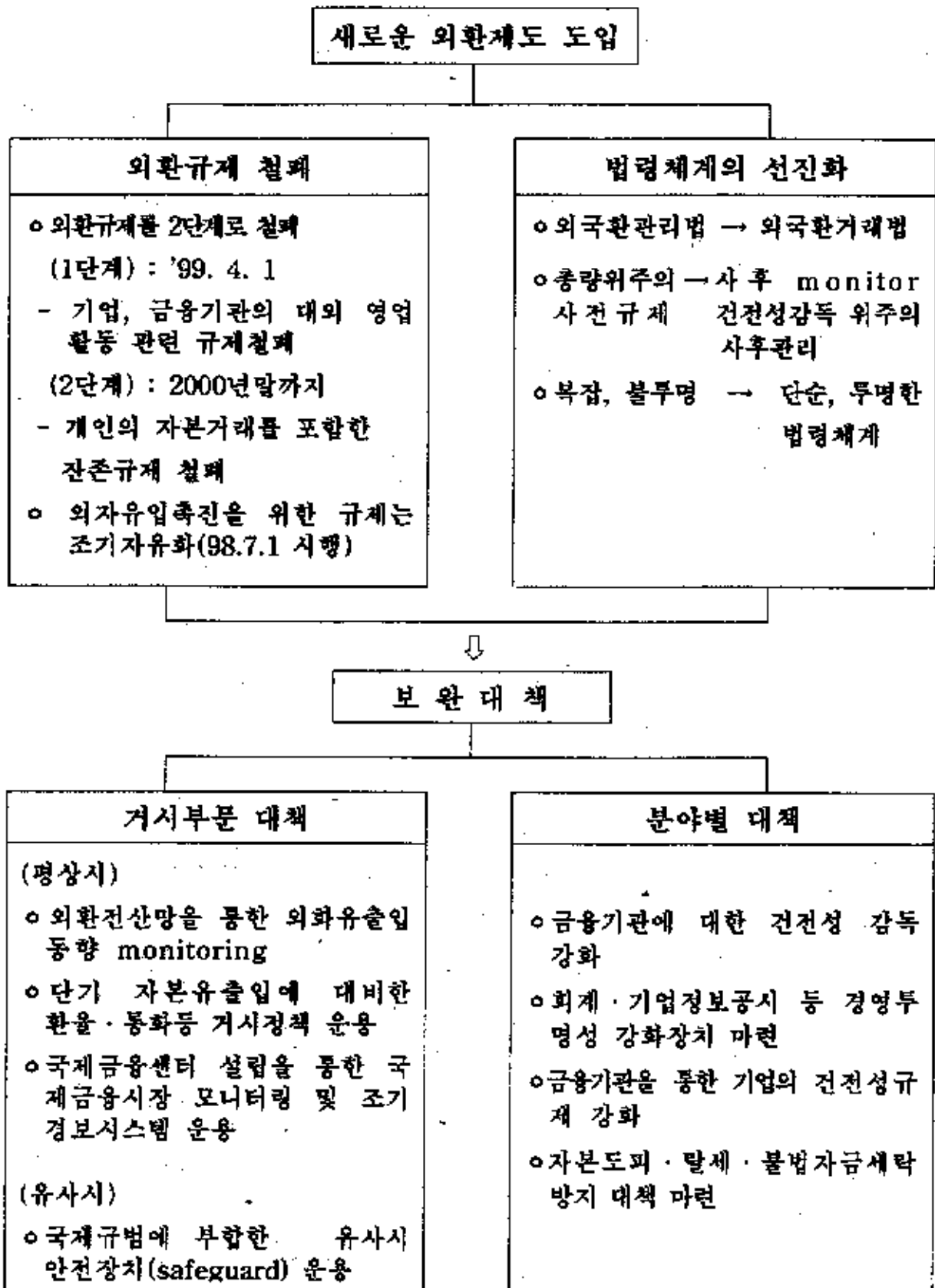
- 비거주자의 국내 1년 미만 예금(신탁포함) 거래
- 기업의 해외예금 및 신용공여, 대외채권 회수의무
- 해외예금, 차입, 신용공여, 부동산투자 등 개인의 모든 자본거래
- 기타 국내 증권사를 경유하지 않는 대내외 증권투자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파생금융거래등 모두 자유화

※ 금번에 취하는 원화자금조달 제한등 보완조치를 2000년말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지 여부는 외환거래 동향 및 국제 단기자본이동 규제논의 동향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재검토할 예정

IV. 自由化에 따른 影響과 向後 政策方向

-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환시장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나 환율변동성은 높아질 것임
 - 외화유출입 측면 : 이번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외화유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미 채권·주식·CP 등 개방되어 있고 국내기업의 무역관련 단기해외차입도 이미 허용되어 있기 때문
 - 외환거래 측면 : 거래가 늘어나고 선물시장 등 해지시장도 발전할 것이나 투기적 공격여지는 제한적이거나 상존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높아질 것임
- 자본유출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거시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 정도가 높아져 보다 세련된 거시경제정책 운영이 필요
 -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되, 중장기적으로 환율이 경제의 기초여건과 괴리되지 않도록 함
 - 내외금리차도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함
 - 외환보유고 확충 노력을 지속
 -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동 비외채성 자금유입(equity-financing)을 유도하여 외채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
- 이번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강화
 - 대내적으로는 이번조치로 기업들의 환위험 축소, 외환시장 발전, 경제제질 강화등을 위해 더 늦출 수 없음을 설득
 - 대외적으로는 최근의 외환위기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과 최근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orderly fashion으로 추진함을 강조

<參考 1> : 外換制度 全面改編의 概念



<參考 2> 最近의 國際短期資本移動에 대한 論議動向

□ 논의 배경

- 금융의 세계적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국제자본이동 규모도 크게 증가
 - 96년중 신흥시장에 대한 순민간자본 유입규모가 3268억불에 달하였고
 - 동 자본유입은 이들 국가의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
-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유입된 국제자본이 급격히 유출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융·외환위기가 확산
 - 이에따라 단기자본이동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전

[신흥시장에의 純민간자본유입규모(억불)]

1995	1996	1997	1998e	1999f
2284	3268	2596	1519	1400

*자료 : IIF, January 27, 1999

- 다만, 자본이동 규제에 대한 논의는 자본이동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 금융위기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에 집중

□ 주요쟁점 및 입장

- 단기자본 규제에 대한 필요성
 -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규제강화를 주장
 -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다소 소극적인 입장

○ 단기자본이동 규제의 방법 (직접규제 vs. 가격규제)

- 경제여건에 따라 적절한 직접규제방식이 필요 (Krugman등)
- 양적규제(자본유출입 허가제, 자본유출의 일시적 정지 등) 보다는 가격규제(외환거래세, VDR 등)가 바람직(Tobin, Dornbush)

○ Hedge fund에 대한 규제

- 투자가 보호, 위험관리, 시장안정을 위해 헤지펀드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

□ 향후 논의전망

○ G-22제무차관회의(99.3, 런던), IC/DC회의(99.4, 워싱턴), G-7 정상회담(99.6, 독일 쾰른)등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해 단기자본 규제대책에 대한 중요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

-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결제은행(BIS)에 '국제신용공여 등록제도' 도입방안 마련
- 단기자금흐름 등을 모니터하고 정보공개기준 마련 등을 담당할 '국제감독기구 설립' 방안 마련 등

○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논의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규제 방식에 의한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

〈參考 3〉 資本流出統制 主張의 背景과 限界

□ 크루그먼 교수는 외환위기국가에 대하여 금리인하 및 정부지출 확대등을 통해 국내경기를 우선적으로 부양할 것을 주장

○ 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유출현상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본통제를 병행사용할 것을 권장

□ 98.9 말레이시아 정부는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자본통제조치를 단행

○ 외국인 보유증권의 매도 제한등 자본 유출을 통제하고 역외시장에 있는 말레이시아 통화의 교환성을 제한

□ 자본통제 결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하여 채권가산금리가 대폭 상승 [440(7.31)→1,475(9.3)]하였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한 외자도입이 어려워 졌음

○ 말레이시아는 '99. 2. 4. 자본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

□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이 우리에게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 없음

○ 자본통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경제안정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고려할 수 있는 조치

- 우리의 경우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자본 유출 가능성도 없으므로 자본통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음

- 크루그먼 교수도 자본통제가 바람직하지 않으나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으로 자본통제를 주장

- 우리나라도 긴급상황에서 Safeguard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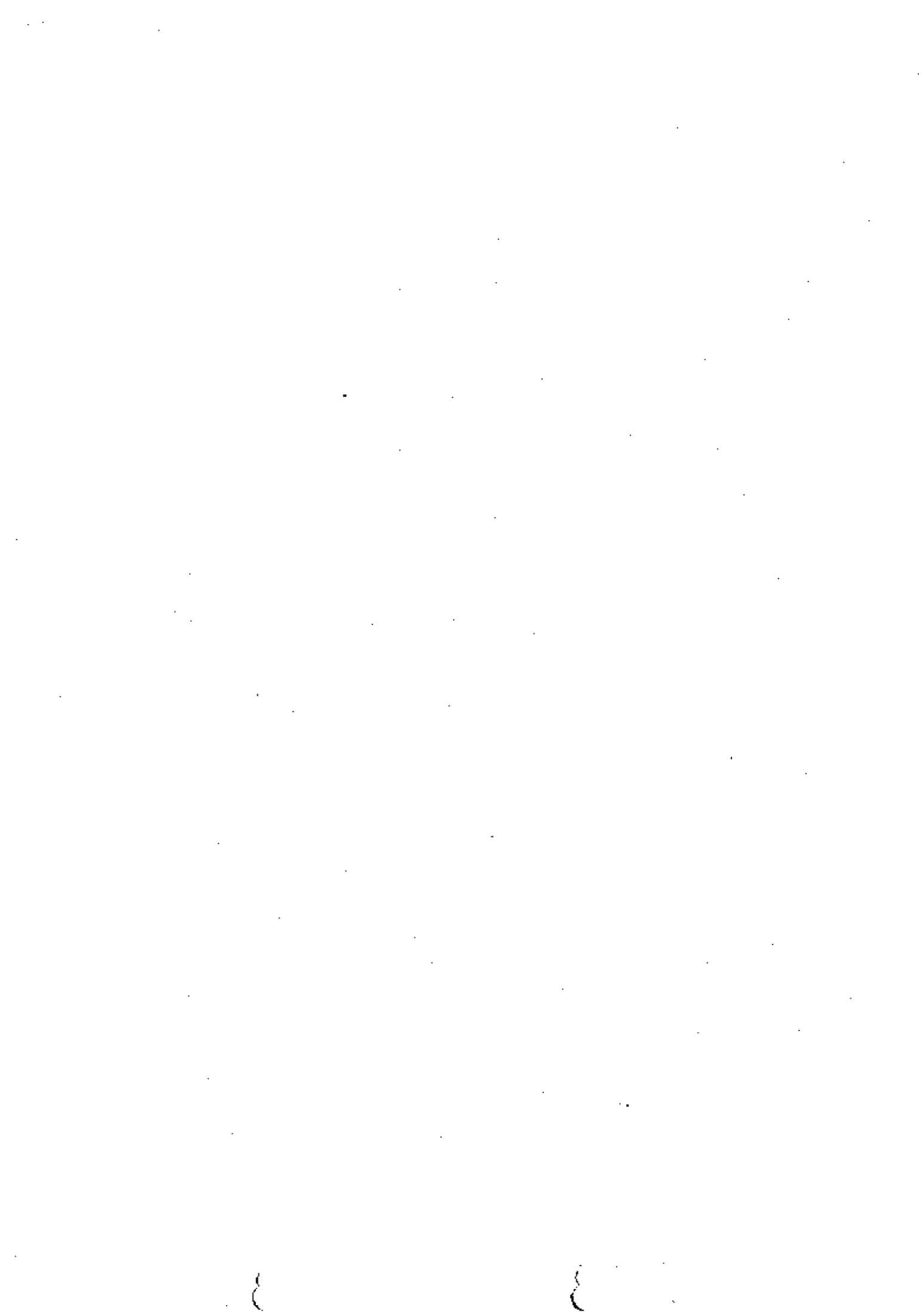
- 이번 자유화조치는 외환시장의 발전 등을 위해 외환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려는 조치이므로 크루그먼교수의 자본유출 규제논의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음
- 다만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가 취한 조치에서 보듯이 원화차입 창구가 될 수 있는 역외 원화시장의 개설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 '98년 9월 말레이시아 자본거래 제한조치 내용('98.9.1)

- 말레이시아 증권매입 외국인의 매도 제한(1년)
- 기타 자본거래 제한조치
 - 대외계정간의 자금이체 제한(중앙은행 승인 필요)
 - 대외계정에서 거주자계정으로의 자금이체 제한()
 - 10,000불 이상의 거주자 외화유출 제한()
 - 외국은행의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말레이시아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금지등

※ 2월4일 자본거래 제한조치 완화 내용

- 2월 15일부터 주식시장의 외국자본 대외유출 허용
- 2월 15일 이전에 투자된 1년 미만 외국자본에 대해 투자기간에 따른 국외유출세(exit tax) 부과
 - 투자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 : 원금의 30%
 - 투자기간이 7개월 ~ 9개월인 경우 : 원금의 20%
 - 투자기간이 9개월 ~ 1년 미만인 경우 : 원금의 10%
- *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무세
- 자본이득세 신설 : '99년 2월 15일 이후 투자되는 외국자본에 대해 자본이득세 부과
 - 1년 이내 유출시 30%, 1년 초과인 경우 10%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定着方案

1999. 3. 11(木)

財 政 經 濟 部
金 融 政 策 局

< 目 次 >

1. 信用貸出 現況

2. 信用貸出 擴大의 制約要因

가. 信用貸出이 이루어지기 위한 金融環境

나. 우리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制約條件

다. 金融與件의 變化와 信用貸出 擴大의 推進方向

3. 信用貸出 擴大方案 (토의사항)

가. 企業信用의 提高를 위한 制度改善 추진

나. 信用情報 管理・評價制度의 擴充

다. 金融機關의 信用分析能力 개발

라. 기타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金融環境의 개선

1. 信用貸出 現況

□ 일반적으로 信用貸出이란 不動産 등 物的擔保 없이 이루어지는 대출, 소위 無擔保貸出을 의미하나

○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금융기관의 支給保證 또는 계열사·개인의 連帶保證 없이 차입자의 지불능력만에 기초한 대출임

□ 物的擔保 없이 지원되는 信用貸出(無擔保貸出)은 '90년대 중반부터 擔保貸出의 비중을 상회하여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임

○ 이는 信用保證基金등 금융기관의 信用保證 증가('90년 5.3조원 → '98년 33.1조원)에 따른 것으로서

○ 금융기관 보증대출을 제외한 純粹信用貸出은 약 40% 수준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80% 수준보다 크게 낮으며

○ 純粹信用貸出도 계열사·개인의 連帶保證·拘束性預金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선진국 기준의 신용대출 비중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

* 어떠한 형태의 擔保·保證없이 제공되는 신용대출은 전체대출중 12-13% 수준으로 추정

※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비중 추이

(%)

	'90	'95	'96	'97	'98
담 보 대 출	56.1	51.0	49.1	48.1	44.8
신 용 대 출	43.9	49.0	50.9	51.9	55.2
순수신용	35.8	39.3	41.6	41.3	39.2
(중소기업)	(26.2)	(34.2)	(35.9)	(33.6)	(32.5)
보증대출	8.1	9.7	9.4	10.6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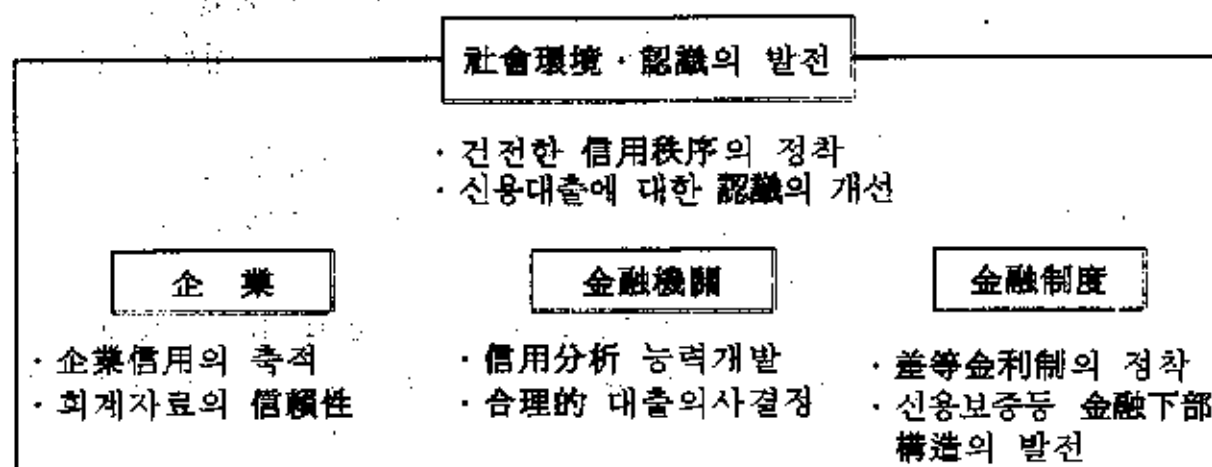
* 자료 : 한국은행

2. 信用貸出의 制約要因

가. 信用貸出이 이루어지기 위한 金融環境

- 신용대출은 차입자의 金錢的·時間的 費用을 줄여줄 뿐 아니라
 - 국민경제적으로도 금융자금이 기업의 收益性 등에 기초한 신용에 따라 배분됨으로서 資金運用의 效率性을 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은 金融産業의 先進化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나,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內部力量 뿐만 아니라 金融與件이 함께 성숙되어야 함
 - 企業은 우선 스스로 형성한 신용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용이 客觀化될 수 있도록 정확한 會計資料 등의 작성
 - 金融機關은 기업의 신용을 分析·評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신용에 따라 合理的으로 貸出意思決定을 할 수 있는 체제 확립
 - 金融制度상으로는 기업의 信用評價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이 金利등 대출조건을 伸縮的으로 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社會的으로도 신용이 중시되는 건전한 經濟秩序가 확립되고 신용대출과 관련한 不合理한 認識의 改善이 필요

※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되기 위한 조건



나. 우리 金融機關의 信用貸出 制約條件

企業 측면

- 기업이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財務構造가 건전하고 事業性이 있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신용이 충분치 못한 기업은 금융기관의 債權保全上 불가피하게 擔保를 징구하거나 혹은 대출 자체를 할 수 없음
 - * 선진국의 경우에도 信用不良 기업에 대해서는 擔保나 保證을 요구
- 우리기업의 경우 그동안 외부차입을 통한 外形成長에 치중함에 따라 借入依存度가 높고 財務構造도 취약
 - * 제조업 부채비율 : 한국('97) 396.3%, 미국('96) 153.5%, 일본('96) 193.2%
- 粉飾會計 등으로 企業會計資料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企業정보도 불충분하여 客觀的인 신용분석이 곤란
 - '98 課稅申告者 133만명중 記帳申告者는 43만명(32.4%)에 불과

金融機關 측면

- 그동안 資金超過需要 상태가 지속되고 金利를 彈力的으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신용대출을 할 誘因이 부족
- 이에따라,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을 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대출을 결정하는 審査分析 능력의 개발 미흡
 - * 선진국의 與信審査役(loan officer)은 최소한 3년이상 교육과정을 거친 專門職이나 우리의 경우 순환보직, 결정권한 미흡 등으로 專門性 취약
- 금융기관 직원들도 신용대출 부실화시 事後責任 문제를 의식하여 債權保全이 확실한 擔保貸出을 선호

金融制度 측면

- 금융제도상으로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貸出金利를 差等化할 수 있는 金利運用 여건이 형성되어야 함

- '96.1 加算金利 自由化 이후 금융기관의 가산금리폭은 크게 확대되었고 운용면에서도 상당히 정착되고 있는 상황

* 주요국의 대출금리 차등폭 비교

					(%p)
한 국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6.0 수준	12.0	10.0	10.5	12.2	

주) 한국은 '98.12월, 여타국은 '96.8 조사자료 기준

- 금융기관의 신용분석 능력을 보완해 줄 국내 信用評價機關은 아직까지 公信력이 부족하고 금융기관 利用도 저조한 상태

- * '97 부도기업의 無保證社債 발행당시 신용등급사례 (투자적격 : BBB이상)
한보철강 BBB('97.1), 기아자동차 A('97.7), 만도기계 AA('97.12)

社會環境 측면

- 신용대출에 대한 不合理한 社會的 認識이 상존하고 있음

- 借入者의 信用이 부족한 경우에도 擔保징구는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信用度 제고를 위한 노력은 관심을 두지 않음
- 금융기관은 不實化된 신용대출의 취급 책임자의 辨償을 요구하고 사회적으로도 신용대출은 特惠라는 시각이 존재

- 현행 民法・會社整理法상 담보부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 신용대출은 우선변제권이 否認되는 등 채권보전에 不利

다. 金融與件의 變化와 信用貸出 擴大의 推進方向

□ 최근 經濟危機 및 構造調整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기관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하기 시작

◦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擔保價値의 下落경험으로 금융기관의 債權確保의 安全性에 대한 인식이 변화

◦ 企業構造調整을 통하여 부채비율 축소등 기업의 財務構造 改善計劃이 본격적으로 추진

◦ 低金利체제가 정착되고 景氣가 점차 회복될 경우 資金需要가 늘어나게 되어 危險管理·審査기능의 강화 필요

◦ 제일·서울은행 매각 등에 따라 外國金融機關과 國內金融機關이 직접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 이러한 여건변화로 인해 우리 금융기관도 담보대출 등 不合理한 金融慣行을 先進化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

□ 신용대출은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企業文化·金融市場의 수준 및 社會認識 등 제반여건이 밀접하게 연계

*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대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금융기관은 소수의 優良企業에게만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은 擔保가 있어도 자금확보가 어려워질 우려

□ 따라서, 신용대출이 實效性 있게 확대되기 위하여는

◦ 금융기관 스스로의 업무나 관행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둘러싼 金融環境의 발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고

◦ 오랜동안의 慣行으로 굳어져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해소하고자 하기보다는 持續的이고 段階的인 개선 노력이 필요

3. 信用貸出 擴大方案 (토의사항)

가. 企業信用의 提高를 위한 制度改善 추진

- ☐ 금융기관이 기업의 信用度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가 되는 企業會計資料의 信賴性 제고
 - 中小企業의 경우 會計·經營管理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
- ☐ 기업이 財務構造改善 등을 통해 信用을 축적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기업을 믿고 대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나. 信用情報 管理·評價制度의 擴充

- ☐ 은행연합회의 信用情報 集中管理制度의 개선·확충
 - 신용정보 집중관리제도의 活用度를 높이기 위해 金融去來 情報의 폭을 넓히고 國稅滯納情報 추가 등 정보의 質을 개선
- ☐ 信用評價·情報會社의 公信力을 제고하여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進入規制 완화 등을 통한 信用情報産業 전체의 활성화 방안
 - 不實評價회사의 평가결과 활용제한 등 市場機能에 의한 신용평가·정보회사의 公信力 제고방안

다. 金融機關의 信用分析能力 개발

☐ 금융기관의 信用評價方式을 개선

- 차주의 신용도에 대한 科學的이고 合理的인 분석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기반 마련

☐ 금융기관의 與信審査·管理體制 및 組織構造를 효율화

- 여신심사·집행의 과정에 있어 專門性を 강화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확립
- 지원된 여신의 事後管理 강화방안

☐ 금융기관 직원들이 신용대출에 積極的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 신용대출 취급에 대한 免責문제, 금융기관 종사자의 認識의 개선 등

라. 기타 信用貸出 擴大를 위한 金融環境의 개선

☐ 신용대출 취급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誘引方案의 강구

- 신용대출 실적이 양호한 금융기관이 실적이 저조한 금융기관에 비하여 우대받을 수 있는 金融·稅制상의 우대방안
-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신용대출 취급자가 制度的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방안

☐ 中小企業의 신용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信用保證制度 등의 확충

☐ 기타 사회전반의 건전한 信用秩序 意識의 제고를 위한 논의

- 신용과 관련한 法制의 개선, 社會意識의 확립방안